



다시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4년 11월 6일(수)

## 「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」 전체회의 개최

- 대통령실 중심 14개 부처·기관 간 기술보호 협력체계를 강화
-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기술 유출사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수사
- 韓美日 ‘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’ , 정책·수사 공조 강화 추진

대통령실은 오늘(11/6, 수) 왕윤중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<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> 2024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(장소:국가정보원)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와 관련된 총 14개의 부처 및 정보·수사기관이 참석했습니다. (국가정보원, 법무부, 산업부, 외교부, 과기부, 중기부, 교육부, 기재부, 대검찰청, 경찰청, 특허청, 관세청, 해양경찰청, 국가지식재산위원회)

\* 합동 대응단은 작년 11월 10개 부처·기관이 참여하여 출범한 이래 △국제 공조(총괄:법무부) △법집행(총괄:대검찰청) △정책·제도(총괄:산업부)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. 현안 발생시 수시 실무회의를 열고 매 반기별 전체회의를 개최,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며, 금년 4월부터는 ‘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’를 구축,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
이날 회의에서는 △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‘정부합동수사단’ 신설 방안 △‘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’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△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‘한미 간 법제 비교연구’ 결과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관련자료를



이날 회의에서는 외국과의 R&D 협력 확대에 따른 보안대책,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지침 등도 논의됐습니다.

<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>은 기술 패권경쟁으로 인해 더욱 격화하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 한 치의 허점도 허용치 않고 우리 기술을 수호해 나간다는 각오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. <끝>